www.krila.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T 02·3488·7300 / F 02·3488·73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Newsletter

November 2012 Vol. 40 11

이달의 issue

KRILA 논단
지역간 연계 · 협력사업을 통한 상생발전

Interview
김태복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CONTENTS

이달의 issue 지역간 상생발전

4 ● 권두언
지역발전이라는 먼길을 가려면

6 ● KRILA 논단
지역간 연계 · 협력사업을 통한 상생발전

11 ● Interview
김태복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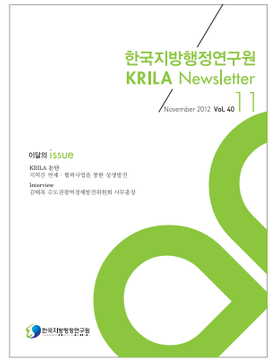
15 ● 자치단체탐험
수도권 도심 속에서 만나는 역사의 숨결

● 해외 우수사례 18
유럽연합(EU)의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

● 도시통계 23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 현황

● 연구원 동정 29

● 알림마당 30



November 2012 **Vol. 4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ewsletter 통권 제40호
발행인 / 한 표 환
편집인 / 뉴스레터 위원회
연락처 / T 02·3488·7300 / F 02·3488·7309
디자인 / (주)소프트하우스

본 뉴스레터는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Newsletter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지역발전이라는 먼길을 가려면



소 기 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

21세기 글로벌 사회는 가수 싸이가 보여주듯,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이 각광받는 시기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가 혼자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듯이, 팀 플레이가 동시에 강조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역발전정책도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추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하나는 분권화 흐름이다. 이제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생활을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부에서 민간으로 권한을 넘기려는 물줄기다. 다른 하나는 지역 사이에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기하려는 상생발전의 흐름이다. 지역간 연계협력은 상생발전전략의 핵심 요소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지역이 함께 협력하여 서로 잘 사는 길을 찾아 보자' 는 뜻이다.

과거에는 서울만 바라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과 서로 힘을 합쳐 윈윈(win-win) 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 지역들은 지금까지 서로들 지나칠 정도로 경쟁하는 일이 잦았다. 옆 지자체가 어떤 일을 하여 돈 좀 번다 싶으면 바로 베껴서 그 일에 끼어들었다. 결국은 둘 다 손해를 보고 끝나는 일이 많았다. 또, 옆 지자체에 있는 시설이 우리 지역에 없다면, 우리 지역도 만들자고 나섰으나, 어려운 살림 때문에 영세하고 소박한 수준의 시설물을 지었다. 결국 완공한 다음 날부터 활용이 문제되고, 운영비는 두고두고 짐덩어리가 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이런 지역간 과당 경쟁, 과잉 투자 관행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인근 지역들이 힘을 합쳐 공동 자원을 만들고, 자원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며 잘 살아 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몇 해 동안 이같은 취지를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사업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지난 해부터 십 여 차례에 걸쳐 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함양 · 산청 · 하동 · 장수 · 남원 · 곡성 · 구례 등 지리산권 7개 시군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리산문화권 관광연계 개발방안을 논의하였다. 공주 · 청양 · 부여 · 연기 · 논산 · 서천 등 금강권 6개 시군은 백제권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토론하였다. 광양 · 순천 · 보성 · 남해 · 하동 등 남해안 남중권 5개 시군은 지역특산품 공동마케팅 방안을 모색하였다.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공감의 폭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이끌어 냈다.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하나 하나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별도 예산 확보 문제였다. 지금과 같이 지자체별로 배정되는 지출한도 내에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리 요란한 인센티브를 내건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인 단독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고,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연계협력사업만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마침내 '13년부터는 별도 예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새로운 사업이니만큼 국회에서 만만찮은 검토가 남아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새로운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질적인 과당 경쟁이나 과잉투자를 줄일 뿐만 아니라, 한 지자체 힘으로는 벅찬 일을 할 수도 있고, 공동 노력으로 지역특화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도 늘어나리라고 믿는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는 격언대로, 지역들이 상생 내지 동업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힘을 합치면, 지금보다 훨씬 알찬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간 연계 · 협력사업을 통한 상생발전



김 선 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지역간 연계 · 협력의 확대 필요성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광역화전략 즉, "사업구역의 광역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전략" 이며 광역화전략의 성공적 운영기제는 다름 아닌 지역간 연계 · 협력에 있다.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3차원적 계획권역은 명칭, 목표, 수준은 서로 달라도 지역간 연계 · 협력을 운영 매카니즘으로 전제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

협력이란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대체로 볼 때 각각의 단위들이 개별적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작용에 기초한 협상을 통해 자원, 권한 및 역할 등을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이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통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 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때 협력하는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는 물론,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권역간 연계 · 협력도 포함하는 실용적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고령화 · 저성장 시대에는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중앙–지방간 협력사업,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사업(시설)의 융복합화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연계협력방식을 추진함으로써 부족한 인적, 물적 사업역량을 보완하고 한정된 지역발전 투자재원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하여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할 뿐 아니라 분산투자 로 인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하고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결합생산을 통하여 투입 대비 추가이익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공동 생산함으로써 사업규모와 추진역량을 중대시키고 임계수요(criticalthreshold)를 확보함으로써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실현해야 한다.

Ⅱ.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실태

1.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한 직후인 2010년부터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지역발전정책의 권역유형별로 시범공모사업의 형태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미 2010년과 2011년에 총 62개 사업에 대해 1,83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신규사업 5개를 추가하여 67개 사업에 대해 1,48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경우 시 · 도의 1차 평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친 후, 관계부처가 연계협력도, 타당성,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2010년 자치단체가 기초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339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두 차례 평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최종 14개 사업을 선정하여 이 중 12개 사업에 대해 2011년부터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시 · 도간 또는 광역권간 연계 ·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적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전 · 후방 연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 · 도간 연계협력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광역위원회가 시 · 도에서 제출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지경부 평가, KIAT 평가,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총 3년 이내인데, 1년마다 사업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2010년 30개 사업에 대한 540억원의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다. 한편 초광역개발권의 연계협력사업은 동서남해안 인접 시군,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표 1〉 연계협력사업의 지원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광특계정
기초생활권 (시 · 군)	–	83억원 (10개)	123억원 (12개, 신규 2개)	지역계정
광역경제권 (시 · 도)	540억원 (30개)	1,000억원 (46개, 신규 16개)	1,150억원 (46개, 신규 150억)	광역계정
초광역개발권 (광역권간)	67억원 (5개)	148억원 (6개, 신규 1개)	215억원 (9개, 신규 3개)	광역계정
계	607억원 (35개)	1,231억원 (62개)	1,488억원 (67+α)	

2. 연계협력사업의 추진과정의 평가

정부에서 광역적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행정구역 단위의 투자가 관행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첫째, 계획수립 마감, 연계협력 사업의 평가, 예산 반영 등을 염두에 두고 짧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다보니 즉흥적으로 급조된(ad hoc basis) 계획이 많아 발굴건수에 비해 사업계획의 충실도와 실현가능성 등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협력에 의한 지역발전은 시간을 정해두고 마감하는 사안이 아니라 지속적로 추진해야 할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계획수립 단계에 임박해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경우, 협의조정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합의형성에 이르지 못 채, 단순한 구상 또는 제안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둘째, 연계협력사업의 선정과정이 중앙 위주의 하향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지역이나 권역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고유한 사업이 발굴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역이나 권역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지역주민의 참여도 부족하다. 셋째,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연계협력의 추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한 형편이다.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별도의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인센티브도 미약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 발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계협력사업 예산이 자치단체 단독사업 예산과 동일한 계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원한도 내에서 굳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연계협력사업을 기획하기 보다는 단독사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와 같이 기존 사업예산을 활용할 경우 당해 사업목적에 구속받아 다양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이 제도적으로 곤란하다. 넷째, 균특법(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계협력사업의 발굴과 재원분담 등을 책임지고 있는 광역위원회의 추진역량이 부족하고, 광역위원회와 시도간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연계협력사업 발굴이나 협의 · 조정 등의 역할 수행이 미약하며, 부처마다 사업추진방식도 서로 달라 자치단체에서 다수 부처에 관련된 융복합형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및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다.

Ⅲ. 연계협력사업의 활성화방안

원칙적으로 협력은 당사자간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율적 협력을 유도하여 합의 형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 ·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합의형성에 이르는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 지원함으로써 동기유발 → 협의 · 조정 → 합의형성 → 성공모델 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전 자치단체에 연계협력사업을 정착시켜야 한다.

첫째, 상시적 연계협력사업 발굴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계획수립 단계에 임박해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경우, 계획수립이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계획수립 단계 이전에 연중 상시적인 사업발굴체계가 필요하며, 매년 사업의 발굴, 협의 · 조정, 합의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화를 성사시키는 상시적 절차를 운용해야 한다. 상시적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협력대상사업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지역발전위원회와 광역위원회는 지역별 협력대상자원 및 협력대상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 분석을 통하여 협력사업에 대한 인벤토리(inventory)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를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협력의 동기를 유발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별로 효율적인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잠재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이 발굴되면 일차적으로 해당 자치단체 간에 예비회의 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협력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협의 ·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한 경우 주요 합의사항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협력협약(MOU)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협약을 체결한 연계협력사업이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인 경우, 관계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추진기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공동추진기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이며, 이미 선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용이 수월한 대안이다. 또한 관련 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연계협력사업을 위탁받아 실무적으로 추진할 지방공기업, 사업단 등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다.

셋째, 연계협력사업의 활성화에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지역간 연계협력의 가장 큰 유인동기로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꼽고 있다. 따라서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행정구역단위의 재원지원이 아닌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자체를 지원하는 별도의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광특회계뿐만 아니라 기존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우대할 뿐 아니라 연계협력사업 공모에 지원하는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안정적인 지원재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의 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광특회계에 연계협력계정 신설,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에 연계협력사업 항목 신설, 중앙과 지방의 특정 재원과 연계하여 세출항목 설치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으로 연계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넷째, 지역간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연계협력사업을 지속적, 효과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의 Interreg Ⅳ와 같은 제도적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적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공모와 행정, 재정, 기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자치단체로 하여금 상시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체계를 정착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조성을 통해 보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협력은 물론, 남북지역 간 협력, 나아가 동북아 국경지역 간 협력으로 까지 발전시키고 내용적으로도 단일 품목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양하고 부처 · 기능 간 연계형, 패키지 지원형, 프로그램형 등의 사업으로 연계 · 협력을 확대하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협력촉진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계협력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협력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지역 간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협력의 동기부여, 합의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협력절차의 진행 등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법에는 법률의 목적, 협력사업의 유형, 지원대상 분야, 협력계획의 수립, 협의절차, 재원지원, 추진체계, 지역 간 협약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김 태 복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바쁘신 중에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패턴은 광역화된 지가 오래이며, 지역 그리고 국가간 경제 및 교류활동의 범위도 행정구역을 벗어난지 오래입니다. 5+2 광역경제권은 현 정부의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전국을 7개로 나눈 광역경제권을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은 그 중 하나의 광역경제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과 시 · 도간 연계 협력 추진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9년 10월 출범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 · 인천광역시장 · 경기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지역내 교수 · 경제전문가 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내에는 60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싱크탱크(think tank)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 인천 · 경기가 함께 공동의 발전비전을 설정하고 주요 발전자원을 도출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과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내 자체적으로 광역인프라 기획단과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도권내 20여개의 광역협력 사무를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 주요 정책으로 지역간 연계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수도권광역경제권에서는 어떠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역경제권은 지역발전정책의 지역특화, 지방분권, 지역간 연계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 정책으로,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연계와 협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사업으로 시 · 도간 분절된 지역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광역권 단위의 공동협력사업을 촉진하고자 광역연계협력사업이 3년째 발굴 ·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참여 지자체의 재원 등 국비와 지방비 공동 매칭을 기반으로하며, 광역권별로 권역내 혹은 권역간 지역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행정구역간, 부처간, 사업간 협력프로그램을 실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광역 연계협력사업으로 총 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2010년도에 '고용창출형 IMT 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지능형 로봇서비스산업 지원사업', '한방약초 신시장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 기반조성사업' 이, 2011년도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기반한 스마트프로덕트 신산업 육성 사업', 2012년도 신규 사업으로 '한라-지리산 천연물자원 기반 약물성 정보 DB구축 및 신약개발' 이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투자재원 대비 추진성과를 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만, 단기적으로 추진성과를 논하기에는 재원분담 과정, 사업 추진체계, 제도적 장치의 미비성 등으로 인해 적잖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5개 사업 모두 타권역의 지역과 연계한 초광역 사업으로, 수도권내외 권역간 관련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다른 지역과의 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경제적 기대효과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기업지원, 대학의 산학연계형 사업추진으로 기술개발 및 청년일자리 등 고용 창출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간 협력을 실천하는 의미로 지역간 과도한 경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역발전사업이 중앙 주도에 의해 추진이 되어 왔지만, 이제부터는 지역간의 자발적 협력의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간 상생협력과 공동의 발전을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도권광역경제권에서는 수도권 3개시도 뿐만이 아니라, 지역간 상생을 실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그 첫걸음으로, 「수도권 3개 시 · 도가 나아갈 지역상생발전 선언문(제7차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12.6.4)」을 3개 시 · 도지사가 공동발표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이웃 지역을 비롯하여 다른지역, 도시와의 농촌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간 소통과 교류를 시도하고, 지역간 상생협력방안 공동연구의 추진 등 지역간 상생의 실천을 위해 작은 것부터 그 노력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무총장님께서 사무총장직을 수행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역이 발전하는 일은 정책추진 주체간의 배려와 상생 그리고 협력을 추구하는데서 출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6차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2011.12.8)에서 선언한 「강화 · 옹진 · 연천 등 접경 · 낙후지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규제대상 제외 공동 건의문」과 제7차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2012.6.4)에서의 「수도권 3개 시 · 도가 나아갈 지역상생발전 선언」은 서울 · 인천 · 경기가 파트너로써의 협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간 협력을 통한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생의 원칙을 새로운 수도권의 사회 질서 기틀로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과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내 신설된 '상생협력위원회' 는 상생 매커니즘 탄생의 첫 신호탄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2천5백만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시 · 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현안에 대한 업무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과 다른 지역 상호간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발전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내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의 심화 등으로 정치 · 사회분야에서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도 위와 같은 문제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면과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공동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주민생활에 좀 더 밀접해 있으며 시급한 주요 사업들을 시민들과 소통하며 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지방재정의 과도한 중앙의존과 기구 및 인력 운용의 중앙통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자체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참된 지방 분권 구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수도권내 지자체의 관계가 기존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인 동반자로 그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과 지방간 재정구조 불균형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재정의 독립성이 제고 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인력운용에 대한 자율성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조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범국가적인 행사에 적극적인 행 · 재정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수도권광역경제권과 위원회의 미래비전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광역경제권과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위상 강화와 역할 제고가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광역경제권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협력적 발전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격 향상의 중추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경제권은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향후 국가 미래경쟁력을 선도하는 모델로 지금보다 더욱 진화 · 발전하여야 할 것이여 타광역권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별 경쟁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도 단기적 현안 중심의 협의체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협의체로 자리매김해야 될 것입니다.

대담 · 정리 : 김 건 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도권 도심 속에서 만나는 역사의 숨결

600년 도읍지 한양도성을 걷다 _ 서울 성곽길





동대문(흥인지문)

조선시대의 서울인 ‘한양’은 원래 성곽 도시이다. 북악산을 중심으로 한다면 인왕산~남산~낙산을 잇는 성곽이 축조되어 있다. 서울성곽은 사적 제10호로 조선 500년 동안 동대문, 숙정문, 서대문, 남대문 등의 4대문과 홍화문, 광희문, 소덕문, 창의문 등의 4소문에 이어져 서울 장안을 지키던 울타리다. 서울성곽은 조선 태조 때 쌓은 것을 세종 때 크게 개축했으며, 조선 후기 숙종 30년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그 뒤 영조 19년에 부분적인 보수공사를 하였다. ‘서울 성곽길’은 이 성곽을 복원, 정비한 약 18.6km에 달하는 길이다. 서울 성곽길에는 낙산공원 · 와룡공원 · 삼청공원 · 남산공원 등 10개가 넘는 녹지공원과 현재 복원중인 국보 1호 숭례문(崇禮門 · 남대문), 보물 1호 흥인지문(興仁之門 · 동대문)을 포함해 170개에 달하는 문화재가 성곽을 따라 산재돼 있다. 서울 성곽길은 찬란한 역사와 수려한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서울을 대표하는 ‘걷기 좋은 길’이다.

코 스	주 요 구 간	거 리	소요시간
북악산코스	혜화문 → 와룡공원 → 숙정문 → 촛대바위 → 곡장 → 청운대 → 1.21사태소나무 → 백악마루 → 창의문	약 4.7km	약 2시간 25분
낙산코스	장충체육관 → 광희문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 이간수교 → 오간수교 → 흥인지문 → 동대문성곽공원 → 낙산공원 → 혜화문	약 4km	약 2시간
남산코스	숭례문 → 백범광장 → 안중근의사 기념관 → 잠두봉 포토아일랜드 → 팔각정 → N서울타워 → 소나무탐방로 → 국립중앙극장 → 장충체육관	약 4.6km	약 3시간
인왕산코스	창의문 → 윤동주시인의 언덕 → 인왕산 정상 → 국사당 → 경교장 → 돈의문터 → 정동공원 → 배재학당 → 소의문터 → 남지터 → 숭례문	약 5.3km	약 3시간 15분

박물관 속으로 들어온 세계문화유산 _ ***수원화성박물관***




수원화성




수원화성박물관

박물관하면 선뜻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지루하고 재미없는 유물과 전시물의 관람일 것이다. 그러나 수원화성박물관은 과거 유물 전시 위주의 박물관 운영을 뛰어넘어 전시, 교육, 체험이 어우러지는 박물관을 만들고 있다.

수원화성박물관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문박물관으로 18세기 전 세계 군사건축물의 모범이자 조선시대 성곽문화의 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단순한 성곽이 아닌 도시 전체이기도 하다. 수원화성박물관은 수원신도시 건설과 수원화성을 축성한 정조의 사상과 정신을 포함하여 수원화성 축성에 참여한 인물, 수원화성에 주둔했던 장용영 군사, 그리고 정조의 8일간의 수원화성행차를 통해 각종 문화행사를 모형과 유물을 통하여 전시하고 있다. 1층 입구에 들어서면 수원화성 축소 모형이 있어 한눈에 수원화성을 볼 수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수원화성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수원화성에 살던 사람들 등의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다. 유물 중심의 박물관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디오라마와 축소모형 등이 많은 박물관이라서 어린이들과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근대문화유산의 보고 _ ***인천 개항장 거리***

우리는 전통시대 문화유산에 비해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한국 근대사가 일제 식민지로 귀결되었기에 치욕스러운 역사로만 평가해왔기 때문에 이 시기가 우리에게 남겨준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근대문화유산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보전 · 발전하고 있다.

개항장이었던 지금의 인천 중구 북성동, 중앙동, 해안동 일대엔 당시의 흔적과 유물이 보전되어 있어 개항기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다. 구 일본 영사관 자리에 세워진 중구청과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일대의 청일조계지,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으로 변모한 일본 제18은행과 인천개항박물관이 된 제1은행, 구 일본 제58은행을 비롯해 백 년 전의 공장과 창고들을 리모델링해 만든 인천아트플랫폼 등이 개항과 근대화의 첨병으로서 인천이 걸어 온 발자취를 보여준다.


구)일본 제18은행


구)일본 제58은행

응봉산 자락에 자리한 자유공원은 서구인들 사이 사교활동을 위한 공동조계지로 서울의 파고다공원보다 8년이나 앞선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다. 인천의 바다와 항구를 내려다보며 지금도 인천시민의 휴식처로 변함없이 사랑받는 자유공원엔 제물포구락부와 홍예문도 있다. 그밖에 1886년 한 · 불 조약 후 백년이 넘도록 인천 카톨릭의 모(母)교회로 자리 매김해 온 답동성당과 한국 최초의 성공회 성당인 인천내동교회 등도 개항장 길에서 만날 수 있다.


제물포구락


인천개항박물관(구 일본 제1은행)

정리 (주)소프트하우스 www.e-softhouse.com

유럽연합(EU)의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

유럽연합(EU)의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의 변화

1980년대 후반부터 구조기금(structural fund)과 리스본 전략(운영지침)을 마련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유럽연합(EU)의 지역정책은 회원국 간 불균형 해소 및 경제 · 사회 통합정책, 그리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초월하는 지역 간 협력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점차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비회원국과의 협력수요도 갈수록 증대되어 지역 간 협력정책은 유럽연합 통합정책(cohesion policy)의 3대 목표[1]가 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EU의 지역 간 협력정책은 1989년에 도입된 지역협력프로그램인 Interreg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Interreg 프로그램은 구조기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한다. Interreg I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Interreg II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Interreg III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Interreg IV(명칭이 Territorial Cooperation으로 변경)는 2007년에 시작하여 2013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Interreg Ⅰ에서는 국경지역 협력사업을 지원하였으며, Interreg II에서는 국경지역 협력(Interreg IIA)과 국가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Interreg IIB) 및 특정지역의 공간계획 협력(Interreg IIC)을 지원하였다. Interreg Ⅲ에서는 국경지역 협력(Interreg IIIA)과 국가간 협력(Interreg ⅢB) 및 지역간 협력(Interreg ⅢC)을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Interreg Ⅳ, 즉 TCO에서는 국경지역 협력(Interreg ⅣA)과 국가간 협력(Interreg ⅣB)은 이전과 같지만 지역간 협력(Interreg ⅣC)에 과거 별도로 추진되던 Urbact Ⅱ, Interact Ⅱ 및 ESPON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1) 유럽연합 통합정책(cohesion policy)의 3대 목표는 균형발전(convergence), 경쟁력과 고용(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그리고 지역간 협력(territorial cooperation)이다(이원섭, 2011).

〈표 1〉 EU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의 변화

구 분	Interreg Ⅰ (1990-93)	Interreg Ⅱ (1994-99)	Interreg Ⅲ (2000-06)	TCO(Interreg Ⅳ) (2007-13)
국경지역협력	Interreg Ⅰ	Interreg ⅡA	Interreg ⅢA	Interreg ⅣA
에너지네트워크	-	Interreg ⅡB	-	-
국가간 협력	-	Interreg ⅡC Article10 시범사업	Interreg ⅢB	Interreg ⅣB
지역간 협력	-	-	Interreg ⅢC	Interreg ⅣC
특별프로그램	-	-	Interact ESPON	Interact Ⅱ ESPON Ⅱ Urbact Ⅱ

*자료 : 이원섭(2011)

유럽연합(EU)의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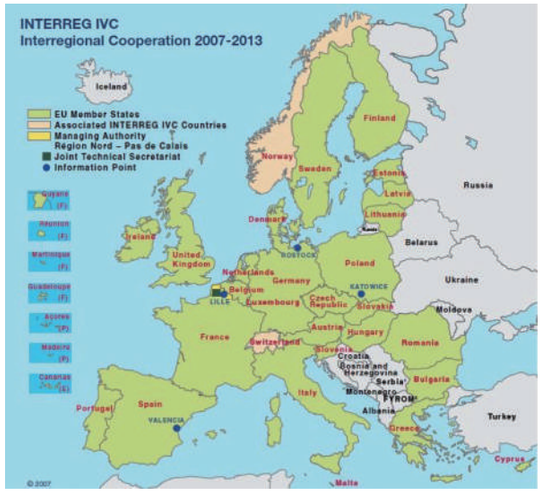
Interreg Ⅳ 중에서 첫째, 국경지역 협력(Interreg ⅣA)은 국경에 의해 단절된 지역의 직접적인 협력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 관광 · 문화 · 국경무역개발을 통한 기업가 정신의 장려, 천연자원의 공동관리, 도농 간 연계 지원, 교통통신 네트워크의 접근성 개선, 인프라의 공동 이용, 행정 · 고용 · 기회균등 관련사업 등을 다루고 있다.

둘째, 국가간 협력(Interreg ⅣB)은 특정 공간 내의 통합을 증진하는 활동을 지원하는데, 대학을 비롯하여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혁신체계 구축, 수자원 · 하천 · 호수 · 바다 등의 환경관리, 교통 · 통신망 구축 등과 같은 접근성 개선, 그리고 다핵형 도시개발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다룬다.[2]

셋째, 지역간 협력(Interreg ⅣC 및 네트워킹 사업)은 지역개발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모범사례 교류를 지원하는데 Interreg ⅣC의 경우 혁신과 지식경제(Priority 1), 그리고 환경 및 위험예방(Priority 2)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네트워킹 사업인 Urbact Ⅱ에서는 도시정책에 관한 경험 교류와 상호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주제별 네트워크, 워킹그룹, 회의개최, 정책수단 개발 등을 지원하고, ESPON(European Spatial Planning Observation Network)은 응용연구, 분석, 기법 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 제공을, Interact Ⅱ에서는 협력프로그램의 운영관리 개선을 위해 관리 및 행정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국경지역 협력(Interreg ⅣA) 프로그램의 경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2개 프로그램에 64억 유로를, 그리고 국가간 협력(Interreg ⅣB) 프로그램의 경우 13개 프로그램에 18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림 1〉 INTERREG Ⅳ C 지역



*자료출처 :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atlas2007/eu/crossborder/index_en.htm

Interreg Ⅳ C 협력사업의 유형과 특성

특히, EU의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인 Interreg Ⅳ C 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 유형은 지역기반 프로젝트(Regional Initiative Project, Type 1)와 지역도입 프로젝트(Capitalization, Type 2)로 구분된다. 지역기반 프로젝트(Type 1)는 프로젝트 경험의 지역 간 교환과 전파 및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지역도입 프로젝트(Type 2)는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2012년 현재 184개의 지역선도 유형 프로젝트와 20개의 지역도입 유형 프로젝트가 승인되어 추진 중이다.

Interreg Ⅳ C는 리스본 전략 및 괴텐부르크 전략에서 선정된 주제 즉 혁신과 지식경제(Priority 1), 환경 및 위험예방(Priority 2)에 집중하고 있는데,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하위 세부주제를 제시하여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혁신과 지식경제(Priority 1) 주제는 세부적으로 혁신과 연구기술개발, 기업가주의 및 중소기업, 정보사회, 고용 · 인적자본 및 교육으로 구분되고, 환경 및 위험예방(Priority 2) 주제는 기후변화, 물관리, 폐자원 관리, 생물 다양성과 자연유산 보존, 에너지 및 지속가능교통, 그리고 문화유산 및 경관으로 구분된다.[3)]

Interreg Ⅳ C 프로그램은 One Programme-One Fund 원칙에 의해 예산이 지원 되고있으며, 2011년을 기준으로 Priority 1에 66백만유로, Priority 2에 44백만유로가 지원되었다. 사실상 Interreg Ⅳ C 예산은 EU 전체 구조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자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예산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표 2〉 Interreg Ⅳ C 협력사업의 유형과 특성

구 분	지역기반 프로젝트(Type 1)	지역도입 프로젝트(Type 2)
목적	프로젝트 경험의 교환, 전파 및 이전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전환
집행 및 사무기구 참여여부	필수요건 아님	필수요건
EC 지원여부	지원 없음	Fast Track 프로젝트에 한해 지원
지정 파트너수	-제안된 협력의 강도에 따라 다름 -가벼운 네트워크 프로젝트에는 다수의 파트너가 가능하나, 협력의 정도가 높은 프로젝트의 경우 파트너수 제한 -소형 프로그램의 경우 파트너의 수가 8로 제한되어 있음	-참여 파트너의 수는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와 관련하여 지정되어 있음 -최소 참여 국가수(6개국) -최대 참여 국가수(10개국)
지정 기간	36개월(소형 프로그램: 최대 48개월)	24개월
예산조달 및 지원규모	-ERDF 지원 최소금액: 5십만 유로 -ERDF 지원 최대금액: 5백만 유로 (단, 최대금액 지원 가능 사례는 예외적)	-ERDF 지원 최소금액: 3십만 유로 -ERDF 지원 최대금액: 3백만 유로
수익집단	공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기관 및 공공조직	

*자료 : EU(2008), Interreg Ⅳ C Programme Manual.

Interreg Ⅳ C의 우수사례 및 시사점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모범사례 교류를 지원하는 Interreg Ⅳ C 프로그램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National Industrial Symbiosis Programme(NISP)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환경 및 위험예방에 관한 Interreg Ⅳ C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간단히 논하기로 한다.

먼저 UK에 위치해 있는 12개 지역은 환경 · 사회 · 경제적으로 전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Interreg Ⅳ C의 National Industrial Symbiosis Programme(NISP)을 통해서 무료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3) Interreg Ⅳ C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nterreg4c.net/) 참조.

있다. 즉 자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물질, 에너지, 물, 전문지식, 기술을 물리적으로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산업공생을 시도한 것인데, 12개 지역은 산업공생의 인지도를 높이고 프로그램 참여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과 관련된 기관, 산업 폐기물의 관리 · 사용 등의 공생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이때 각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팀을 보조하는 핵심산업 대표단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그룹도 조직되어 있다.

또 하나의 우수사례는 요크셔 지역의 GWE 바이오가스 회사를 들 수 있다. 요크셔 지역에는 계속 증가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메탄가스가 다량 발생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해져가고 있었다. 더욱이 주변의 생산공장이나 소매상인들로부터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포장상태나 크기가 다양해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NISP는 계획단계 동안 바이오 가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지역을 초월하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을 정의해 주었으며, 무엇보다 음식물 쓰레기 생산자와 쓰레기 관리회사와의 파트너쉽을 형성하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파트너쉽에 의해 2008년, East Yorkshire에 설립된 GWE 바이오가스 회사는 혐기상태에서 미생물을 이용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혐기성 소화(AD, Anaerobic Digestion) 방식으로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 Environmental Transformation Fund(ETP) 입찰에도 성공하였다. GWE는 요크셔 지역의 연간 50,0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이를 통해 3,200 가구에 연간 2MW의 무공해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연간 28,34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GWE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냄새가 없는 바이오 사료는 농업 관련 회사에 사용이 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 간 협력이 원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20년 이상에 걸쳐 협력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온 EU의 지역 간 협력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 또한 재원으로, 유럽지역개발기금을 통해 협력사업 예산의 75~85%를 부담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와 자치단체의 협력사업 발굴 및 집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때 자치단체간 협력추진기구를 자발적으로 결성하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책도 수반되어 있다. 또한 협약형이든 조합형이든 자치단체 간 협력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적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 또한 재정적인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협력추진기구의 역할이 단순한 사업집행을 넘어서서 연구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역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EU의 경우 지역개발에 있어서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어떻게 다른 지역에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프로젝트가 함께 시행 중이며, 항상적인 정보교류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박 진 경(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현황

1. 개요

- 우리나라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은 지역발전정책의 세 가지 틀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음
  - 즉,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연계협력사업 사업을 발굴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62개 사업에 1,838억원을 지원함

2.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 163개 시 · 군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2010~2014년)」을 통해 제안된 339건의 사업 중에서 1차적으로 14건이 선정되었고 이들 사업 가운데 2011년 신규사업으로 최종 10건이 예산에 반영되었음
  - 163개 시 · 군이 기초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계협력사업 339건을 기획하였고, 각 시 · 도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 연계협력사업 89건을 선정하였으며, 지역발전위원회의 중앙심의회 및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14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음
  - 부처의 협의 과정에서 복분자 광역클러스터, 지리산 자전거 둘레길 조성, 광역 화장실 조성 등의 사업이 부처의 사업과 중복되어, 일반회계 및 광역계정 사업을 제외한 10건이 2011년 신규 사업 예산에 반영되었음
  - 2012년에는 고흥 · 보성 등의 남중권 농산어촌 생태 · 문화 관광연계사업, 임실 · 남원 · 순창의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 등이 우수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되었음

〈표 2〉 2011년 기초생활권 우수 연계협력사업

권 역	지자체		부처 (계정)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권역간	강원 충북 경북	영월 평창 제천 단양 영주 봉화	문화부 (시도)	중부내륙 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 시군간 패키지 관광상품화, 공동홍보·마케팅
	강원 충북 경북	영월 충주 제천 단양 괴산 문경	문화부 (시도)	중부내륙 숲 관광 Mega City 조성	■ 중부내륙산악권 테마 숲 조성을 통한 관광메가시티 조성
	강원 경북	영월 봉화 영양 청송	농식품부 (시도)	사과 공동가공제품화 및 농기업 창업보육	■ 명품사과 공동가공 및 R&D지원으로 농기업 30개 육성
	충남 전북	부여 공주 논산 서천 익산 군산	문화부 (시도)	생태관광 금강연계 사업	■ 금강권 대표상품개발(관광상품, 역사문화 탐방로, 식물원, 자연사박물관 등), 홍보마케팅 확대
	전북 전남 경남	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함양 산청 하동	농식품부 (시군구)	지리산 Eco-Village 조성사업	■ 마을공원 조성, 옛마을 풍경 복원, 소득 연계사업(지역특산물, 공동판매장 등) 문화시설 조성
충청권	충남	서산 당진 예산 홍성	산림청 (시도)	내포문화 숲길 조성	■ 테마길, 등산로·연결도로 정비, 대피소, 쉼터, 표지판 등 조성
호남권	전남	목포 나주 함평 무안 영암 화순 장성 담양	문화부 (시도)	영산강 History Tour	■ 나루터 계류장 및 부대시설 설치, 황포돛배 건조, 공동 홍보
	전북	전주 완주 임실	문화부 (시도)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	■ 한지 문화마을 조성, 한지장인학교 운영,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 등
강원권	강원	영월 평창 정선 태백	문화부 (시도)	지질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 지질자원, 박물관 등 연계 지질관광코스 개발, 공동마케팅
	강원	정선 동해 평창	농식품부 (시도)	헴프(Hemp) 지역특화산업육성	■ 천연소재인 대마(헴프)를 활용한 제조업, 관광산업 육성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내부자료

〈표 3〉 2012년 기초생활권 우수 연계협력사업

권 역	지자체		부처 (계정)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호남권	전남 경남	고흥 보성 순천 여수 광양 하동 남해 사천 진주	농식품부 (시군구)	남중권 농산어촌 생태·문화 관광연계	■ 농산어촌 체험마을별 테마공원 등 관광인프라 확충 ■ 남중권 9개 시군의 통합체험코스개발
	전북	임실 남원 순창	농식품부 (시군구)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	■ 임실(시인마을), 순창(섬진장터), 남원(소리마을)의 마을경관 정비, 연계루트 개발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내부자료

3.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 시·도간의 연계협력사업을 촉진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함

– 시·도 광역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0년 540억원 규모로 산업·문화·환경 등 분야의 30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2011년에는 총 46개 사업에 1,000억원을 지원하였음

– 2012년은 전체 예산 중 국비 150억원(R&D 80억, 비R&D 70억)을 신규로, 총 사업기간 3년 이내(연차별 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함

– 2010년에는 사업당 지원규모가 18억원 내외(중소형)이었으나, 2011년에는 30억원 이상으로 대형화되었음

〈표 4〉 광역경제권 연력협력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개)

구 분	2010년	2011년	신규 예산	2012년	신규 예산
R&D	50(4)	472	423(13)	552	80
비R&D	490(26)	528	125(3)	598	70
총 계	540(30)	1,000	548(16)	1,150	150

*자료 : 지식경제부 내부자료

- 2012년 사업은 R&D와 R&D의 재원부담 조건이 상이하여 R&D사업은 순수 기술 개발 중심으로 추진됨
- 호남권에 가장 많은 10개 사업(217억원)을 지원하였고, 수도권에도 4개 사업(78억원)을 지원함

〈표 5〉 광역경제권 연계 · 협력사업 권역별 지원 현황

단위 : 억원(개)

구 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평가관리비	합 계
사업수	4	8	10	9	8	3	3	–	46
지원예산	78	161	217	223	184	59	63	15	1000

*자료 : 지식경제부 내부자료

- 2010년에 제조업 외에도 문화 · 관광 등 타 부처 소관분야에 8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나, 2011년에는 타 부처 소관분야 사업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으며 신규예산이 R&D 중심으로 편성되어 타 부처 소관분야 사업은 없었음

〈표 6〉 광역경제권 연계 · 협력사업 분야별 지원 사업수 현황

구 분	기계 · 금속	전기 · 전자 · IT	바이오 · 의료 · 화학	문화 · 관광 · 농식품	합 계
2010년 선정	8	5	9	8	30
2011년 선정	4	4	8	–	16

*자료 : 지식경제부 내부자료

〈 표 7 〉 2010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단위: 억 원

권 역	사 업 명	참여 지자체	지원액
수도권	고용창출형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서울 경기 인천 창원	30
	지능형 로봇서비스산업 지원사업	인천 서울 경기 대구	20
	한방약초 신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 기반조성	평창 함양 제천 안동 문경 상주 금산 진안 산청 장흥 영천 강화	10
충청권	미래사회 적응을 위한 대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	대전 충북 충남 공주	12
	충청권 패키징 산업 육성사업	대전 충남 충북	28
	태양전지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전자전달 증대장치 개발	충남 아산 대전	9
	석회석 자원 등을 활용한 저탄소산업 육성사업	충북 충남 대전 단양	20
	New-IT 부품과 부품산업용 금형 열처리 기술지원 사업	충남 충북 대전 천안	17
	생체진단 의료기기용 핵심센서 및 키트 개발사업	충북 충남 대전 원주	10
호남권	글로벌 그린몰드메카 구축사업	광주 전북 전남	18
	헬스케어 소재 국제상호인증 제품화 지원사업	광주 전남 전북 화순	28
	eco-인쇄전자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광주 전북 전남 순천	23
	고비강도 소재응용 근린부품 실용화사업	광주 전남 전북	28
	청정기술 활용 피톤치드의 기능성을 이용한 의류제품 개발 및 사업화	전북 익산 장성	11
	천일염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체제 운영지원 사업	고창 무안 영광 마포	7
	승용, 상용 전기자동차 겸용 급속 충전 시스템 개발사업	광주 전남 전북	10.5
동남권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한 근거리/원거리 RADAR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부산 울산	23
	BLCD모터 표준화 및 표준모델보급 사업	경남 부산 울산	30
	전자파환경 유해성 대책 Green Belt 사업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구미	11.5
	부생가스를 이용한 녹색기술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부산 울산 경남	25
대경권	대경권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사업	대구 경북	16
	BY2C 연계협력사업	봉화 영양 청송 영월	10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대구 경북	25
	대경 자동차부품소재 상용화 및 구조전환 지원사업	경북 경산 영천 대구	26
	인플루엔자 백신원료 맞춤형 생산시설 구축	경북 안동 대구	20
	힐링용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대구 경북	8

권 역	사 업 명	참여 지자체	지원액
강원권	차세대 마그네슘 제련 국산화를 통한 초경량부품 소재개발 광역연계사업	강원 강릉 원주 인천 충남 전남	23
	DMZ 인접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리공원(Geopark) 조성 사업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7
제주권	증강체험형 개별/관광/테마파크 상품 생산기반 확립	제주시 서귀포 제주도	9.5
	제주유배문화의 녹색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사업	제주시 서귀포 제주도	4.5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내부자료

〈 표 8 〉 2010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단위: 억 원

권 역	사 업 명	참여 지자체	지원액
수도권	스마트프로덕트 신산업육성사업	경기 부산 서울 경북	30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 지원 사업	충북 대전 충남	45
	리튬이온전지 부품소재 국산화	충남 충북 대전	35
호남권	터치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광주 전북 전남	45
	탄소섬유 기반 해양 스포츠·레저장비 개발	전북 전남 부산	35
	3G-Bio 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사업	전남 광주 인천	30
대경권	IT융합 금형기술 고도화 사업	대구 경북	35
	백두대간Greenmine비즈니스구축사업	경북 강원	30
	수송용 소재산업 기술개발사업	대구 경북 부산	20
동남권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개발사업	경남 부산 울산	35
	대중소 연계형 이차전지 핵심소재 실용화사업	울산 경남 경북 구미	30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IT 융합 로봇 생태계 조성	부산 경남 경북	23
	해양플랜트 Subsea 초고압 시험인증 구축 사업	경남 부산 울산	20
강원권	구조용 부품·소재 상용화 개발 및 플랫폼 구축	강원 전남 대구	35
제주권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	제주 경기 경북	50
통합과제	가축질병제어를 위한 Bio Security System 개발	경북 충남 강원	50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내부자료

김 도 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제6차 한 · 일 지방자치제도 연구회」 개최

주 제 / 한 · 일 대도시 및 특별자치시 제도
일 시 / 2012. 10. 26(금) 14:00 ~ 17:30
장 소 / 일본정책대학원대학 세미나실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정책대학원대학



「상해행정학원 국제컨퍼런스」 참가

주 제 / 리더십의 연구개발 : 이론과 적용
일 시 / 2012. 10. 18(목) ~ 22(월)
장 소 / 중국 상해행정학원
주 최 / 중국 상해행정학원



「지방자치발전 정책개발」 시도관계자 연찬회

일 시 / 2012. 10. 31(수), 10:00 ~ 16:30
장 소 / 대전광역시

정기간행물 발간

● KRILA FOCUS (10월호)

– 걷는 길 조성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 방안(김도형)



KRILA 교육연수

02 · 3488 · 7353

● 제4기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 교육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2. 11. 14 ~ 16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5기 주민자치센터 교육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2. 10. 31 ~ 11. 2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알림마당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Newsletter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 02·3488·7361 / yjtak@krila.re.kr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간 상생협력과 공동발전 세미나」 개최

주 제 / 지역간 상생협력과 공동발전
일 시 / 2012. 11. 19(월) 14:00 ~ 17:0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주 최 / 5+2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주 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 원 / 지역발전위원회

주요내용 /

내 용		비 고
식전행사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업무협약식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사무국)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 사무총장
주제발표	·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활성화 – 지역간 협력의 실태와 과제, 지역간 연계협력 및 발전전략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국내외 상생발전정책 사례 및 시사점 – 국내외 상생발전 정책의 성공사례와 시사점, 발전방안 등	김진석 (전북발전연구원)

